

등촌동 워크숍 03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참가신청QR코드

일시: 8월 23일(수) 19시,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

발제: 이상욱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

토론: 서원철 (공공운수노조 기획부장),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치위원회), 건설노조 현장활동가

주최: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회원모임

문의: pssp4001@gmail.com

[발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연합정당이면 가능한가?

: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 논쟁과 쟁점 검토

이상욱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

1. 들어가며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022년 11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정치·총선방침 추진을 공표하였음.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대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경수 위원장은 직권으로 임시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이에 독단적인 일방강행에 문제의식을 가진 대의원, 현장간부(조합원)의 반대 연서명이 광범위하게 조직되면서 갈등이 격화됨.
- 이에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4.20)는 제76차 임시대의원대회(이하, 424임대)에서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을 토론 건으로 논의하기로 함. 양경수 집행부는 「노동중심 진보대연합정당 건설안」을 정치·총선방침으로 제출했음.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 하는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치방침과 함께 내년 총선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선방침을 제시했음. 핵심적인 내용으로 △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정당을 만들어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추진한다, △ 후보 선출은 합의 정신에 기초한다, △ 총선 승리 후 복귀를 원하는 정당의 당선자들은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424임대에서 양경수 집행부가 제출한 정치·총선방침 안에 대한 찬반 격론이 벌어짐. 수많은 이견과 쟁점을 남긴 이후,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가 구성되어 매주 회의를 진행해옴. 현재, 논의기구에서 제출된 ‘단일 정치방침(안)과 3개의 총선방침(안)¹⁾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 중. 단일안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격론이 벌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본 발제문에서는 민주노총의 지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돌아보고, 정치방침·총선방침 각각의 안을 비교 검토하고자 함.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현재 상태와 혁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왜 이렇게 격론이 벌어졌는가? 왜 배타적 지지방침은 사라졌는가?

- 424임대에서 이양수 정치위원장은 진보정당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7년 대선 단일화 실패 (복수후보 지지방침 현장의 혼란 발생이 핵심적 평가), 2022년 대선 단일화 실패 (3명의 지지후보, 진보정치의 단결을 실현하지 않을 때, 진보정당이 대안정당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

1) 1안)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광창 : 조합원이 주도하는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

2안) 금속노조 정치위원장 홍지욱 : 진보-좌파 정당사이의 합의를 전제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방안

3안) 서울본부 본부장 김잔익 :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선거연대 총선방침

임) 이후 진행된 대선평가(중앙집행위원회)를 근거로 삼음. 이처럼 선거시기마다 복수의 진보정당(후보) 지지 반복, 단일한 정치방침 수립 실패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지지부진해왔다고 진단. 결국 진보정치 분열로 조합원들의 회의감은 높아지고, 진보정당 지지율은 지속 하락 상태라는 것. 이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은 진보연합정당으로 정권탄압과 진보정치 위기를 돌파하고, 2024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기도 함.

- 하지만, 진보정당이 여러 개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은 20여 년에 걸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좌절된 결과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본래 목표는 “노동자계급이 이념적, 조직적으로 제 정치세력과 분별·정립하여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었음. 현재 시점에서 진보정당의 이념-노선은 후퇴하였고, 조직은 분열하였으며 노동자운동(민주노총) 역시 영향력 있는 세력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당위를 앞세운 진보연합정당 추진은 과거 갈등과 실패를 똑같이 재연할 수 있음. 더욱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혼란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의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음. 이처럼 진보연합정당 추진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의 원인을 찾아보며,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어떤 문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자 함.

① 노동자 정치세력화 시작과 패권주의

-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1996년 12월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에 맞선 96·97년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논의가 불붙기 시작.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운동은 1997년 대선 ‘건설국민승리 21²⁾’을 거쳐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면서 본격화 됨. 민주노동당 창당은 진보정치연합을 비롯한 소위 평등파³⁾의 주도로 민주노총이 함께하면서 추진. 이후 2001년 자주파가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거 합류함. 당시는 민주노동당이 초석을 닦던 2000-2003년 시기로 정파연합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존재하였음.

-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결의와 지원을 통해 건설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산물.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의 조직적 관계를 2001년 대의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립함. “정당과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조직체이면서도 상대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즉, 대중조직과 진보정당(정치적 결사체)간의 상호 협력과 긴장을 유지하는 관계 맺음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음. 배타적 지지방침은

2) 국민승리21은 1997년 대선에서 총파업 당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여 1.2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1999년 11월 15일 정당 해산 신청을 하며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로 전환한다.

3) 민주노동당 내 정파 구도는 대체로 1980년대 사회성격논쟁에 뿌리를 둔다. ‘자주파’는 ‘민족해방파’ (NL) 계열을, ‘평등파’는 ‘민중민주파’ (PD) 계열을 가리킨다. 자주파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민족 모순’ (분단)과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파악하며, 반미, 통일운동에 적극적이다. 반면 평등파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모순’에 주목하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도모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평등파는 외세의 지배도 국내 권력을 통해 관철되므로, 군사독재·파시즘과 자본의 권력에 맞서는 투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점.

- **(패권주의 확대)** 정파연합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전폭적 지지·지원을 통해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명(비례8, 지역2)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서 진보정치 희망을 보여줌. 하지만 반대로 정파갈등을 억제하고 통합해온 과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함. 즉, 당의 외적 성장과 달리,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위기가 고조됨. 당내 특정세력(자주파)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 행태를 반복함. 또한 1인 대표제의 맹점을 활용하여, ‘세팅선거’를 통해서 당직과 공직을 독점하고자 함. 특히, 의회주의와 원내정당화 경향이 강화될수록 지배연합 교체나 정파 안배, 책임정치 등이 작동하지 않게 됨.

*자주파가 대대적으로 주소지를 거점으로 변경(위장전입)한 용산지구당 사건(2002), 광주 북구에서 당비를 대납한 사건(2004), 1인 대표제 도입을 통한 다수파의 당직 독식(1기 최고위 선거 13명 중 10명 차지)이 지속됨.

② 이념-노선 차이의 폭발과 자주파의 혁신거부

- **(북한 핵실험-일심회 사건)** 패권적 행태로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는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드러내며 갈등을 더욱 키웠음.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992년 남과 북이 채택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스스로 파기한 역사적 사건이었음. 이에 진보진영뿐 아니라 각계에서 북한 핵실험을 비판하는 입장을 즉각 제출.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발표한 입장은 “강한 충격과 유감을 표명한다”는 11줄짜리 성명.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거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없었음.

-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결의문’을 두고 격론이 벌어짐. 평등파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반대’로 바꾸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담은 수정안을 제시. 반면, 자주파는 유감 표명마저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함. 결국 자주파 수정안이 안건으로 확정되자 평등파 중앙위원이 퇴장하여 정족수 미달로 특별결의문 채택이 무산됨. 어떤 입장도 채택하지 못한 것⁴⁾. 자주파는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에 북한의 자위권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

- 북핵 문제에 관한 논란이 커지던 10월 24일,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터져나옴. 일심회에 속한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남한의 정치 동향과 민주노동당 내부 성원의 인적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북한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 사건의 파장은 민주노동당에 치명적이었으나 당 지도부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일심회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당 내부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했지만, 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라며 침묵으로 일관.

4) 《한겨레21》은 “진보는 판문점에서 멈춘다”는 글에서 “민주노동당의 북핵 인식이 대중들과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북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끝내 내놓지 못했다. 진보정당의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 ‘반핵’ 원칙이 북한 앞에서 흔들린 것이다”라며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때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급속히 떨어지면서 4.2%로 곤두박질. 당 내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당에 대한 배신, 당규 위반 등 각종 쟁점이 불붙었음.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부터 일심회 사건까지 이념-노선 차이에 따른 갈등은 수습되지 못하고 분당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함.

- **(대선에서 다시 드러난 패권주의와 혁신안 거부)** 결국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에서 자주파의 패권주의와 혁신 거부로 분당에 이르게 됨. 당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민생 위기를 불러일으켰음에도 자주파는 대선의 핵심 슬로건으로 ‘코리아 연방공화국⁵⁾’을 밀어붙임.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 연방공화국’이 경선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지만, 당내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고, 현재의 정세와 대선 국면에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음. 그럼에도 자주파 김선동 사무총장이 당의 공식 결정을 어기고 ‘코리아 연방공화국’ 슬로건을 담은 포스터를 찍도록 함. 제대로 된 선거를 치루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노동당 내홍은 깊어만 갔고, 권영길 후보는 3.04%라는 득표에 그침. 대선 참패 뒤 꾸려진 비대위(심상정)가 당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안을 제출 했지만 자주파는 이를 거부하였음. 혁신안은 편향적 친북행위 관련자 제명, 패권주의 평가, 정파등록제 도입 및 1인 1표의 제도화, 재정운영의 현대화 방안, 제2창당과 재창당 방안 등을 담고 있었음. 그동안 당내에 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안이었지만 2008년 2월 3일 전당대회에서 자주파의 거부로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 안이 부결되면서 분당 사태에 직면하게 됨. 당직-공직 장악을 위한 패권주의는 북한에 대한 이념-노선 차이를 더 강하게 찍어 누르면서 작동함.

③ 야권연대와 통합진보당

- **(분당 원인 봉합한 통합)** 그 후 진보정당은 잔류파가 남은 민주노동당과 탈당파가 세운 진보신당으로 나뉘게 됨. 이때까지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유지했음. 2011년 민주노동당(잔류파),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이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을 결성하게 됨.

- **(진보정당의 명백한 퇴행)** 통합진보당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민주노동당 분당의 주요 원인인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도 해결되지 않아 우려가 컸음.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의 핵심 원인이었던 이른바 당권파(자주파)의 패권주의 해결 대책은 없었고,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는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수준으로

5) 한반도의 통일 국가 관련 등에 대한 비전으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중 권영길 후보는 2010년에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논쟁 없이 정리되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은 이념의 차이를 무시하고 봉합한 채 결성되었고 총선 직후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남. 또한 당 대의기구에 민주노총 할당을 보장하던 제도가 폐지됨. 민주노총 할당제는 진보정당에서 노동 중심성을 담보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사라진 것. 즉, 패권주의 견제는 없이 이념-노선 차이는 적당히 봉합한 채, 민주노총과는 애매한 거리가 만들어진 것.

- **(퇴행에 일조한 민주노총 총선방침)** 2010-2011년 김영훈 집행부는 ‘반MB 민주대연합’ 노선과 진보대통합을 추진함. 야권연대를 실질적인 정치 전략으로 삼으면서 분열된 진보정당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후 국민참여당을 끌어들이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폐기한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⁶⁾와 배타적 지지반대 입장이 쏟아졌음. 그럼에도 김영훈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유회되고 위임되지도 않은 총선 방침을 중집에서 통과시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집중투표정당’(사실상 배타적 지지)으로 결정하는 독단을 일삼음. 이처럼 민주노총은 “민주대연합” 노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경험은 민주노총에는 진보정당과 다른 방식으로 후과가 남게 됨. 이때부터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기 시작(대표적으로 을지로 위원회). 민주당 역시 진보 정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노동 의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했고, 정치적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점차 주도권을 행사. 특히, 당리당락에 활용하면서 노동조합운동, 사회운동의 기반을 흔들고 있음.

- **(야권연대의 후과)** 결과적으로 야권연대는 단기적으로는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였겠지만, 진보정당의 정책, 이슈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고 정체성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게 됨. 민주노총의 경우, 민주통합당과 정책협약은 민주노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을 뿐더러, 정책협약의 형식과 내용도 충격적.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 체결한 정책협약과는 달리, 민주통합당이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민주노총이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구성. 또한 민주통합당-민주노총 협약은 “제19대 국회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원내 제1당 의석 확보 및 교섭단체 구성 등 안정적인 의회 내 절대다수 의석 확보를 담보하는 총선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며, 민주노총이 민주통합당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명시. 2012년 총선방침은 민주노총 스스로가 야권연대를 통해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망가트린 과정이자, 1997년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추구한 운동전략이 해체되는 과정.

6) 민주노총 임시대회 개최, 4.11총선 방침 격론 예상(2012.3.21.) 보도자료 :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은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대상이 아니다” 는 의결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난 2월 25-26일 실시된 ARS 조합원 정책설문에서 79%의 동의를 얻어 정당명부 투표에서 통합진보당에 집중투표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일부 조합원들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며 4.11총선 후보로도 출마하고 있어 의결안을 놓고 상당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④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

- (부정선거와 폭력사태)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 총 13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듯 보였음. 그러나 곧 부정경선을 폭로하는 사건이 터짐. 5월 2일 당 진상조사위원회는 “총체적 부정·부실선거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만, 당권파(자주파)는 그 결과를 거부함. 이에 더해 5월 12일 비례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안을 표결에 부친 중앙위원회의 방안을 거부한 당권파 계열 당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회의를 진행하던 공동대표단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함.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꾸려진 혁신비대위는 7월 26일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7)안을 상정하지만 부결.

- (세 번의 쇄신 거부와 배타적지지 철회) 많은 사람이 통합진보당이 세 번의 쇄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 5월 2일 부정 경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5월 12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중앙위원회의 폭력 사태, 7월 26일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부결. 세 번째 쇄신의 기회마저 사라지자, 실망한 사람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당을 떠남. 부정 경선문제가 불거진 5월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한 민주노총도 8월 13일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열어 중집 성원 39명 가운데 27명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를 결정함. 즉,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과 배타적 지지방침의 최종적 실패가 선언된 것.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대표 및 정치인들로부터 공격(8)을 받기도 함.

3. <논의기구> 정치·총선방침(안) 비교

- (정치방침 검토) 424임대 이후 구성된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에서 정치방침(안)은 단일안으로 도출됨.

민주노총 정치방침(안)

1.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3. 민주노총은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아 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 체제 전환과 진보개혁을 위한 대중투쟁과 정치 개혁 투쟁을 동반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4.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등 진보 민중세력 및 진보정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중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5. 민주노총은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수준과 단결을 높여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7) 당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로 6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는데, 비례대표 1번, 2번, 3번으로 당선된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윤금순 후보는 비례대표를 사퇴하지만,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는 승복하지 않는다. 당권파는 부정선거를 인정한 당내 진상조사 결과를 거부했다.

8) [논평] 통합진보당 일부 정치인들의 민주노총 공격, 묵과 않겠다 - 그들이야말로 민주노총에 대한 파괴적 내부공격을 선동(2012.8.16) : 소위 구당권파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말 오병윤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 17일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철회는 ‘일부 중앙 간부들의 생각이고 현장은 다르다’ 고 하여 공식결정을 폄하하였으며, 이상규 의원은 ‘(분당하면) 진보신당 끝 난다’ 는 무례한 발언을 하여 진보신당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 424 입대에 제출된 양경수 집행부 안과 비교하면, ① 1항,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나가자’는 문구가 추가되고 ② 2항, ‘제 민주세력 등 진보 정치세력’을 ‘진보 정치세력’으로 정리하고 ③ ‘민주노총은 여러 진보정당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 하는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이었던 5항을 전면 수정 → ‘민주노총은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수준과 단결을 높여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로 정리.

- 논의기구가 제출한 단일안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으나,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동의를 얻지 못함. 또한 5항의 경우,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 추진’의 내용을 근거로 총선방침(진보연합정당)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반대로, ‘연대연합 수준과 단결을 높여내고’를 전제 조건으로 진보정당 건설을 지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는 상태.

- (총선방침 비교)

총선방침 ①안	세부내용	핵심 키워드
<p>조합원이 주도하는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민중의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추진 -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및 진보정치세력과 함께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을 건설 -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투쟁에 기반한 의회정치를 구현. 함께하는 진보정당의 가치, 인사, 조직, 재정, 체계 등이 보장되는 당대당 구조로 운영. -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은 연합지도부를 구성, 지역구후보와 비례후보는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연합지도부에서 구체적인 선출기준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연합정당 · 당대당 구조 · 연합지도부, 합의제 운영
제출 취지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의 정치세력화의 목표는 노동자민중의 집권. 국가 정권의 주인이 되어야 자본계급과 결탁한 기득권, 외세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 정권 문제를 우선 해결 - 4개 진보정당 중에 선택해서 짝어리(무매한 선거방침 극복), 진보정치세력 단결하라(조합원 요구 실현) - 2024년 총선은 윤석열 퇴진, 국민의힘 심판 선거로 만들고 불평등체제 양산하는 보수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의 진보정치세력으로 도약’ - 지난 노동자정치세력화 평가에서 드러난 대리주의·위탁정치, 의회주의, 패권문제는 극복해야 할 것이지 영구적인 것이 아님. →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당대당 연합정당 건설 - 당직·공직 후보는 사전에 합의하여 배분, 연합지도부를 구성하고 총선 후부 선출 기준 마련 		
총선방침 ②안	세부내용	핵심 키워드
<p>진보-좌파 정당사이의 합의를 전제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다시 새롭게 추진 - 지난 시기, 대리-위임정치, 의회주의, 양날개론 극복 → 직접정치, 광장정치, 투쟁정치(민주노총 혁신과 일상 정치사업 전면화) - ‘민주대연합’ 폐기, 진보 다원주의에 입각한 진보-좌파 정당 간의 연대연합을 적극 추진 - 2024년 총선에서 선거연대(후보단일화, 공동정책, 공동선거운동등)를 기본으로, 합의를 전제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총선 대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연합정당 · 민주대연합 폐기 · 중장기적 계획 마련 논의기구 구성

	-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 논의기구 구성	
--	---	--

제출 취지와 근거

-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준비를 진보-좌파 정당,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갖춰야함.
- 거대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현실화시켜야함.
- 핵심적으로 기존 민주 대연합 전면 폐기를 전제로 진보-좌파 정당 사이의 연대연합을 이끌어내고, 구체적 방식과 방안은 진보-좌파 정당과의 논의와 협의로 결정하자는 상황인식.
- ①안은 합의 수위가 높고, ③안의 수위는 낮아서 이를 절충한 형태의 비례연합정당을 제출하게 됨.

총선방침 ③안	세부내용	핵심 키워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선거연대 총선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성찰의 기반 위에서 2024년 총선 투쟁을 시작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 - 민주노총은 사회정치세력으로 스스로 영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전략, 투쟁 계획, 정치적 기획을 수립-실행. -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과 공감과 합의로 선거연대를 최대한 만들고, 상호 신뢰와 연대연합 수준을 높여 냄. - 하반기-2024년 총선 전까지 조합원 집중교육-토론을 통한 진보정당 광범위한 지지와 투표 조직 - 총선평가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계획 수립 논의기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저한 평가와 성찰 ·사회정치세력으로 영향력 확보 ·중장기적 계획 마련 논의기구 구성

제출 취지와 근거

- 정파 갈등과 패권주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 조합원 주체의 정치운동 실종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정치세력화 추진 필요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중장기적 방향으로 추진 필요
- 민주노총이 노동자민중을 대변하는 사회정치세력으로 사회적 지지와 영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동운동 전략, 투쟁, 정치적 기획을 수립하고 실행 우선
- 진보정당이 다원화된 현재의 조건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보정당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상호신뢰와 진보정치 통합의 방향에 대한 합의수준 제고
- 민심대로 의석 배분이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이종당적 금지 등 정당 규제 관련 정당법 개정 →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투쟁 전개
- 2026년 지선,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까지 내다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 강화 계획 수립.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세력이 망라된 특별상설추진기구 설치 추진

- **(실행경로)**⁹⁾ 각각의 총선방침 안의 실행경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①안은 정당법상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진보정당의 단결 수준을 고려하여 서류상 1개의 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하되 당 대 당 구조로 운영. 연합지도부는 합의정신에 기반하여 선출기준을 마련하고,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 합의되지 않는 것들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 ②안은 현재 민주노총은 사회적으로 고립 위기, 정치적으로 대안부재의 상황에 직면. 정치세력화에 대한 명확한 좌표, 단일한 총선방침 안을 제시해야 함. 지역구는 후보단일화, 비례후보는 가칭)무지개비례연합정당으로 출마하고 총선 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의기구를 지속하자는 것. ③안은 총선 전 연합당 혹은 단일정당 방식은 주체적, 현실적으로 무리임을 인정해야 함. 공동투쟁 전선 형성과 노동운동의 전략, 투쟁

9) 실제 후보출마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안 단일정당(내부는 당 대 당 구조로 운영)으로 연합지도부가 비례후보, 지역구후보 선출기준 마련. ②안 비례연합정당으로 비례후보 단일정당 출마, 지역구 후보는 각 당의 후보단일화 추진 ③안 비례후보는 각 당의 후보 출마, 지역구 후보는 각 당의 후보단일화(전 조직적 결합지원)

계획, 정치적 기획을 수립-실행하는 선거연대 추진. 합의와 공감을 통한 연대연합 수준을 높이고, 총선 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의기구로 기능.

4. 지난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 교훈은 해소되었는가?

① 민주노동당 분당-통합진보당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 것인가

- (패권주의와 정파갈등)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수파 패권, 부정선거, 폭력사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해결할 준비가 되었는가. ①안은 당대 당 구조의 운영으로, 합의제에 기초하여 진행하자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 셈. 하지만,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총선방침 안을 밀어붙여 만들어진 연합정당에 합의 기반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제기가 나오는 것. 따라서 ③안이 제시한 것처럼, 총선을 시작으로 진보4당과 민주노총 내부는 신뢰 회복과 단결의 기초를 쌓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 강화 계획 수립을 이어가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특히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 개선으로 정파갈등을 제어할 수 있다면, 과거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함.

- (이념-노선 차이) 더욱이 패권주의는 결국 이념-노선 논쟁에서 파괴적으로 발생했음. 북한 문제와 핵실험 등 심각한 한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받을 것. 그럼에도 ①안은 진보연합정당에서 각 당의 이념, 노선적 합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즉, 구동존이(공통점은 추구, 차이점은 남김) 상태로 공동지향.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

- 2022년 9월 북한은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적 지침을 발표했다. 타국의 핵공격이 아니더라도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나, 심지어 영토완정 즉 남북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 만약,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모든 정치세력은 입장을 요구받게 될 것. 진보연합정당/비례연합정당은 제대로 된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인가.

② 과거와 다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될 것인가

-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방향) 지난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에 관하여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은 대리정치-위임정치, 조합원이 정치의 방관자로 전락 했다는 것. 따라서 직접정치, 광장정치, 광장투쟁 등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나아가야한다고 호소. 하지만 각각의 해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①안은 민주노총 조합원 주도의 진보정치 통합(진보연합정당)을 계기로 노동자민중의 집권, ②안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 대안정치 부재 상태를 극복하고 보수양당 폐해를 넘어서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진출 필요성 강조. 민주대연합 폐기 및 비례연합정당으로 공통분모를 만들자는 것. ③안은 사회정치세력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투쟁)을 벌이면서, 총선 시기 진보정당·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을 높여 진보정치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것. 즉, 양자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424임대에서 드러난 입장차이는 <논의기구> 총선방침 안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심지어 절충안으로 제시된 ②안은 지난 총선 ‘비례위성정당’ 논란을 재연하고 있음. 현재 상황에서 민주노총 중심이 단일한 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양경수 집행부가 표결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분열과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자체의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좌절을 모두가 겪게 될 것.

③ 민주당과의 연대, 제대로 단절할 수 있을까

- (야권연대 반성과 결별) 진보정당들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외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태세를 돌변해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하기도 했음. 가깝게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녹색당과 민중당(현 진보당)은 민주당이 급조한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민주노총 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음.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비례위성정당 추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합 또한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진보정당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기로 함. 이후 민주당이 녹색당과 민중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야권연대의 유혹이 선거연합정당이라는 전술로 작동했음.

- 가장 최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새 전주를 위한 통큰양보! 고맙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반대 시위를 벌여 ‘친이재명계 민주당 후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음. 이는 424임대에서 친민주당 노선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음. 진보연합정당에 가장 적극적인 진보당의 친민주당 행보와 이를 비판하고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 민주노총 집행부 모습에서 우려와 불신은 커지고 있음.

- 민주노총 역시 ‘민주대연합, 야권연대’가 남긴 후과를 처절하게 반성해야 함. 노동정치가 민주당 대리정치로 대체되고, 민주당을 진보의제로 견인했다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을 되짚어 보아야 함. 오히려, 2010-2012년에 실행된 야권연대는 ‘적응전략’을 통해 새로운 이슈, 정책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확립하는 데 성공하게 된 계기였음. 민주노총 집행부는 진보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정치적 오류를 반성해야 함. 어떻게 민주당을 벗어난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을 벌여낼 것인가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간의 핵심 논의지점이 되어야 함.

④ 진보정치 단결, 준비가 된 상태인가

- (진보4당 동상이몽) 그렇다면 현재 진보4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녹색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노동당은 선거연대는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다만, 비례연합정당안이 추가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진보당은 민주노총 입장을 존중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입장. 정의당은 혁신재창당을 결의하고 다양한 입장이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각 진보정당의 상황과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는 진보정당과 우선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진보정당 불신이 깊어질 것. 민주노총 내부, 진보정당과의 이견도 존재하는 진보연합정당 추진은 철회되어야 함. 또한 혹여나 비례연합정당 안에 관심이 높아진다면, 이는 총선 득표를 위한 합치기로 오히려 대중적 비판에 직면할 것.

- (정치운동의 시작점) <논의기구>에서는 현장 정치운동 상황의 심각함을 모두 동의하고 있음. 즉, 현장의 진보정치 불신,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 경향 강화, 노동정치 사업 실종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 특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탄압을 넘기 위한 해법으로 ①안은 정치운동(진보연합정당)으로 우선 돌파하자는 것. 반면, 노조 때리기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가 올라가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반론이 존재. 이에 ③안은 민주노총 변화와 혁신, 그로부터 사회정치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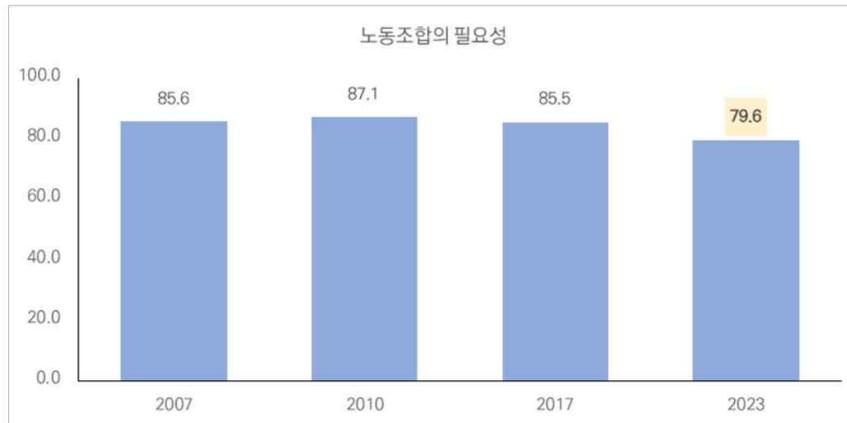
- 민주노총 현실은 어떠한가. ②안 비례연합정당 안도 민주노총의 고립 위기와 대안정치의 부재를 진단했음. 무엇보다 지향하는 비전이 불분명한 채 당위적인 통합을 주문하고 규합할 만큼 민주노총-진보정당 간의 관계 형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 무엇보다 민주노총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정권의 노조 혐오만으로 보기도 어려움. 진보연합정당을 만능열쇠로 영향력(득표)을 과시하면, 대중적 인식이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은 의지의 과잉이자 현실 외면. 정치운동의 시작점은 우리 민주노총이 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작해야 함.

5. 민주노조운동의 현재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자

① 노동조합(민주노총)의 사회적 표상 확립 절실

- (노동조합 인식조사) 직장갑질 119 조사(3/3~10)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7%가 직장 내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함. 또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도 2,000명을 대상으로 <노동·노사관계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함. 노동조합 필요성의 경우 79.6% 응답을 확인함.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해 온 과거 국민인식조사와 연동해서 참고할 수 있음. 이전조사와 비교해 보면 비록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 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조합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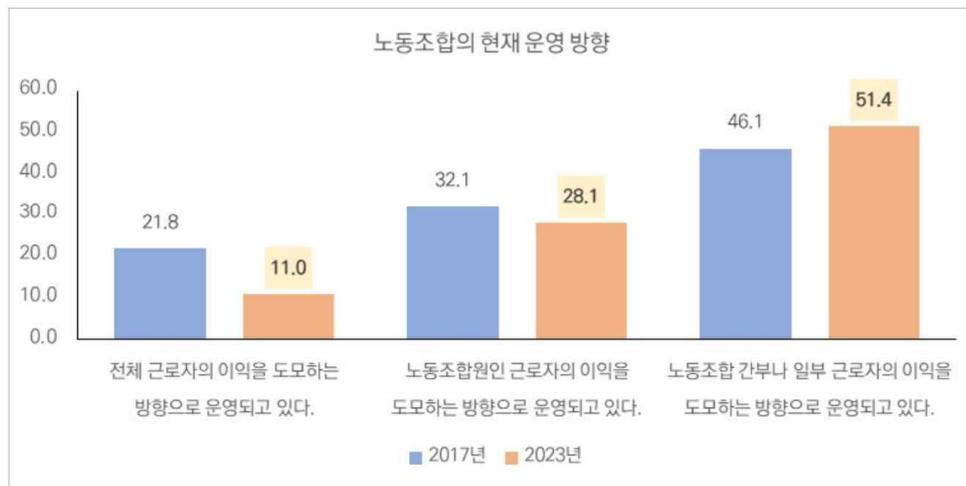
(단위: %)



- 반면 노조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를 놓고는 반응이 냉담했음. 직장갑질 119 조사에서 노조가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5%로 절반에 가까웠고, 경제발전(59.7%), 사회통합(58.7%),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54.8%)에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노동·노사관계 국민인식조사>의 경우, 노조가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2017년 압도적(62.2%)이었으나 2023년 현재(24.3%) 큰 폭으로 부정평가가 높아졌음.

[그림 7] 노동조합의 현재 활동 연도별 변화(2017~2023)

(단위: %)



- (시사점) 더 뼈아픈 결과는 ‘노동조합이 노조 간부나 일부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51.4%로 높아졌다는 점. 반면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가장 낮게 나타남. 사실상 10명 중 8명은 노동조합을 전체 노동자 이해 대변이 아니라 간부와 조합원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인식. 즉,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일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 조합원만의 특수이익 대변으로 간주되는 것.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혁신과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림 10] 노동조합의 현재와 미래 활동

(단위: %)



- 응답자들은 노동조합의 현재 중심 활동이 ‘조합원의 근로개선(58.7%)’이라고 꼽음. 그 다음으로 정치활동(21.0%), 고용안정(11.6%), 사회제도의 개혁(2.9%)순. 반면 노동조합이 미래에 무엇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33.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현재 노동조합의 활동이 ‘조합원 이해’ 대변에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나 사회제도 개혁과 같은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노동조합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길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반대로 해석하면, 불안정-취약노동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노총, 계급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

- 결국 민주노총은 자기 이해에 갇히지 않는 노동자 대표성을 획득해야 함. 정규직 노조 및 조합원들과 사회적 표상 확립의 절박함으로 설득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사업장 단위의 임금 극대화 전략으로는 내부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 산별교섭 효력확장(법제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통해 결국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함. 86% 미조직 노동자에게 대안세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힘을 기울여야 함.

② 독자적 주체성, 현장 정치운동 방향 수립

- (실종된 진보정치) 민주노총은 95년 11월 418,154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하여 2021년 12월 현재 121만명으로 약 80만명의 조합원이 증가. 2016년(65만 명)을 기점으로 5년 만에 55만 명 넘게 늘어남. 민주노총 조합원 중 절반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비롯하여 배타적 지지방침을 경험해본 적이 없음. 오히려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며 독자 정체성을 상실해간 시점이었고, 진보정당 역시 민주당 집권 시기 정의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진보

당의 비례위성정당 결합 시도를 조합원들이 지켜보았음.

- **(민주당 포퓰리즘 비판)** 우선, 민주노총 스스로 야권연대와 결별하고 반민주당 방침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함. 무엇보다 민주당 포퓰리즘은 노동자의 요구를 정쟁의 수단(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으로 삼아 왜곡하고 소비하고 있음.

- 민주당이 진보세력으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민주노총은 실종된 '진보'정치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함. 그 시작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며 민주당 세력과의 결별 선언이 되어야 함. 한편, 현장 정치운동은 전 조직적인 정치세력화 운동 평가 토론, 총선대응을 위한 노동-사회적 의제와 이슈 발굴을 통해 진보정치 강화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

③ 과거를 넘어서는 민주노총의 이념-노선 입장 수립

-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무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북중러 연합이 구축됨. 국제법을 위반하고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끔찍한 전쟁은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실제 민주노총은 러시아의 불법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민중과 연대하기 위한 반전평화 운동에는 소극적이었음. 여전히 북한의 7차 핵실험 위기와 핵무력 법제화(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가 작동하는 한반도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세력 모두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 반핵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면 대중적 외면은 더욱 커질 것.

- **(정파노조 폐해 극복)** 노조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며 토론과 설득을 통해 상호 견제하는 운영원리가 필요.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다양한 차이를 넘어 단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 하지만, 진보당이 채택한 '당 중심 노동운동'은 당이 미조직 노조 건설에 앞장서고, 노조 내 당조직이 정치적 선봉대가 되어 노조를 정치투쟁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구상. 노조 내 건강한 정파 활동은 필요하지만, 특정 정파가 노조활동을 독점하는 정파노조는 해악을 낳음. 정치적 견해가 다름에도 노조가 특정 정당에 종속되는 정파노조가 되면,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은 파괴됨. 이를 제어하고 정파활동의 자정 능력을 갖추도록 과거처럼 민주노총이 방관해서는 안 됨.

- **(결론 : 정치방침 수립을 위하여)**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반복할 만한 여지를 최소화한 상태로 시작해야 함.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정파노조(당 중심 노동운동)의 행태와 총선 시기 선거연합정당 추진은 통합진보당을 또 다시 소환시킴. 더욱이 현재는 민주노총 주도의 연합정당 추진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통합'이 가져 올 분열과 갈등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에게 고스란히 파고 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더군다나 지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시작은 96-97 총파업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의 정

치를 모어나가기 위한 토대와 열망이 존재하였음. 현재 민주노총 사회적 표상의 취약한 토대를 강화할 계획 없이, 의회 진출이나 집권을 위해 통합은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노조의 인적·물적 자원 역량을 더 침식하게 될 것. 따라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수립은 현 시기 진보 정당 무조건 통합에 대한 비판과 ‘민주당과 야권연대’ 결별 선언에서 시작. 또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표상을 확립하기 위해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의 의미를 밝혀가는 사회세력화 운동과 과거를 넘어서는 이념-노선의 합의와 확립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공동대응을 계기로 민주노총 혁신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함.

※ 참고자료

-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제2차 결과발표회: 노동문제를 중심으로(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이소형, 『계간 사회진보연대 170호』 「2020년 민주노총 총선방침 비판 : 실패한 전략은 청산해야한다」
- 임필수, 『계간 사회진보연대 176호』 「2010~20년 10년의 야권연대, 역사와 교훈 : 전략적 야권연대의 최종 붕괴, 대안전략은 존재하는가」
- 민주노총_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10문10답(사회진보연대 소책자)
- 정지현, 『계간 사회진보연대 183호』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의 문제점 : 진보정당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정치방침은 실패한다」

[토론1]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서원철 (공공운수노조 기획부장)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진보 진영의 혁신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대중 운동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3년 4월 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혁신을 통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단결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들의 혁신 요구를 중요하게 다루며 상층부만의 논의가 아니라 15년 전 민주노동당 분당의 원인과 조합원 차원에서 대중적인 토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스스로 혁신하며 진보정당들과 더불어 상호 신뢰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내야 한다.

1. 진보정당들의 노동 중심성 강화

- 진보정당은 노동자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 차원의 계획과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선거 제도와 정치 제도 개혁

-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과 진보정당의 제도적 진출을 가로막는 정치 개혁과 선거 제도 개혁 투쟁을 함께 기획하고 전개해야 한다.

3. 조합원 정치 교육과 대중 토론

- 민주노총은 조합원 정치 교육을 일상 사업화 하고 조속히 정치 교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중적 토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4. 사업장을 넘어 지역 차원에서 실천

- 민주노총은 자신의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노동운동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5.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공동 투쟁 전개

-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과 공동 법 개정 투쟁을 넘어서 공동으로 새로운 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토론2] 건설노조 조합원이 말하는 총선방침

건설노조 조합원

*토론문 현장 배포

전체적으로 이게 될까 싶은 노동정치, 사실은 노동운동 이야기

박성식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민주노동당 등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

※ 노동자 정치세력화 : 노동대중이 계급세력으로서 이념적·조직적으로 성장하여, 보수지배 정치 세력과 구별 정립하고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권력 획득 가능성을 가진 보편적 정치세력이 되는 것

☞ 과연 주요 키워드 어느 하나라도 우리는 지금 손에 쥐고 있나?

※ 진단 방식 : 역사의 현상적 서술과 성격 규정, 특정 세력에 대한 비판만 있는 평가가 아닌 원리적 반성을 위해 진단해 봄. 자주파만 문제인가? 민주노총은 문제없고 진보정당만 문제였나? 전체 운동의 반성 지점 찾아야 하지 않을까? 즉 전체 운동의 문제가 예민한 정치 영역에서 집약 돼서 나타난 것이라는 관점.

○ 실패1. 배타성을 드러낸 정파운동의 실패

민주노동당 ‘패권 논란(패권주의라 비판받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당사자 세력은 견인 운동으로 생각할 수도)’도 결국 배타적 정파운동이 배경임. 기존의 각 정파 운동이 현대 민주주의 질서에 기반해 노선의 현대화, 조직의 개방화(다양성 존중), 운동·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하지 않으면 정파의 정념에 몰두한 패권과 대립, 갈등은 반복될 것임.

○ 실패2. 정파운동의 갈등성을 덮을 압도적 대중과 대중운동의 부재

정파운동 간 차이와 갈등은 없앨 수 없는 조직 속성임. 이러한 정파운동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압도하는 대중과 대중운동이 없으면, 정파 간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 (민주당 진영까지 포괄하여)정파 간 갈등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가 진전을 이루며 대규모 기층 사회세력이 움직이는 국면은 늘 압도적 대중운동과 대중정치가 등장했음.

○ 실패3. 당과 대중운동의 구별 정립 실패

당에 대한 대중조직의 배타적 지지 등 정파세력은 당과 대중조직을 일치시키려 노력하며, 일관되게 장악하려는 운동 목표가 생기고, 그 결과 정파 간 차이와 갈등은 타협과 연대, 합의 영역이 사라지며 더욱 증폭됨.

○ 실패4. 자주파 운동의 은근한 친북과 방아쇠(트리거) 효과

강력한 집단주의 조직력과 대중노선을 기반으로 다수파를 점하는 자주파가 북한이라는 한국사회 최대 쟁점에 직면하면 은근히 잠복 된 친북노선을 드러내 방아쇠가 되면, 운동을 대표하는 각 정파노선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반복됨.

■ 민주노총 정치방침(안)에 대해

○ 실체를 모르는 공허한 정념¹⁰⁾ 언어의 짜집기 ...도무지 깊이와 현실이 없음

-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전략” : 방향과 비전은 뭐고, 어떻게 바꾸자는 거?
- “직접정치” : 노동자가 하는 정치? 대중 정치인 발굴은 안 되고 직접정치만 하자는 거? 현상 형태는 뭐고 실현 원리는 뭐지?
- “광장정치” : 오직 줄기찬 집회와 시위? 지금과 뭐가 다른 거지?
- “진보 정치세력의 결집” : 어디까지가 진보정치 세력이지? 어떻게 모이지?
-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 내는 방식” :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 “정치개혁투쟁” : 구체적 전략같아 좋아. 근데 집중 가능? 그러면 어떻게?
- “빈민” : 이제는 쓰지도 않는 말, 어느 정도 가난해야 빈민인 거지? 얼마나 광범위한 사회계층인 거지?
- “노동중심성” : 민주노총이 주도권을 가지면 노동 중심성? 이 실체가 뭐고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는 묻고 답한 적 있음?

☞ 우리 안의 모호한 정념들에 다시 질문을 던짐으로써 운동의 혁신과 이념의 현대화를 시도해보면 좋겠는데, 정파들이 이미 생활공동체로 결속돼버려 관성만 강하게 작동하는 것 아닐까?

○ 현대화 혁신을 못한 정파운동의 모순적 타협물

-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 : 당을 합치거나 배타적 지지는 앞으로 하지 말자는 말이지?
- “연대연합...진보정당 건설” : 어쨌든 나중엔 하나로 당을 합치자는 거지?

☞ 잘 노력해서 하나의 정치방침 문항으로 구성됐지만, 사실 동상이몽 아님?

☞ [종합] 정말 오랜 부재와 허기 끝에 만드는 정치방침인데 도무지 울림이 없음. 이렇게 정치할 것임? 대중이 모여줄까? 아니 기대감이라도 가져줄까?

☞ [종합] 좀 더 구체적이고 당대의 시대적 코드와 대중적 갈망과 정서를 관통하는 대중 정치전략을 담아야 함.

10) 강하게 집착하여 감정에서 생겨난 생각

■ 민주노총 총선방침 : 긴 전망과 지금 당장의 조화는 불가능?

①안 : 연합정당?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몇 달 남았지? 되겠어? 너무 급해. 다 팽개치고 이것만 할 거야? 욕심도 보여. 지금 민주노총 쥐고 있으니 연합정당 주도권도 쥌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야?

②안 : 비례연합정당? 나름 절충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보이네. 근데 정당들이 합의할까? 어차피 합의 안 할 거니까 아무 시도도 안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면피책인 건 아니야? 아니라면 알겠는데 직접정치, 광장정치, 투쟁정치를 강조하니 의회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님?

③안 : 성찰을 통한 혁신을 기반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세력화부터, 좋아. 지금 바닥이고 당대의 대중과도 우리가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시간도 꽤 걸리겠지.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감상만하고 아무도 실행하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이대로 지리멸렬 쪽 가자는 말로 읽히기도 해. 당장 총선에선 또 아무런 변화와 시도도 없이 무기력을 재확인하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깐 뭐든 지금 시작해. 그리고 총선에서도 뭔가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구상해봐. 넌 선거연합에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뭐가 문젠데?

☞ [종합] 선거연합 구상, 중장기적으로 도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됨. 그 과정으로써 우선은 하나의 방향성으로 폭발시켜 볼 사회 이슈를 만들어 보자. 선거공학 깃발보다 대중적 삶의 변화를 그린 깃발부터 만들어 보자. 우리끼리 역할극 합의 봐서 될 역사도 아니고, 대중과 티키타카 대화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소극장 단막극이 아닌, 동네방네 구석구석에 회자 될 OTT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공동정책 합의부터.

■ 끝까지 회의적인, 나도 모르는 결론, 혹은 짜증 나는 열린결말

평가는 해야하지만 너무 평가 평가... 하진 않는가. 희망과 계획의 자리에 후회가 들어설 때 사람은 늙는데, 운동도 비슷한 거 아닐까?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피할 도리가 없다... 자업자득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대중과 정치는 서로 분리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대중 없는 정치는 담론 속에서 길을 잃고, 아울러 정치가 없다면 대중은 떠들썩한 아우성 속에 저절로 소진되고 말 것이다.

이념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이념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은 화석화된 이념적 도그마가 아닌 현실 위에 서 있을 때 창조적이고 역동적이다.

새롭게 되고자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유일하게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진부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처럼 ‘창조적 실패’를 시도해야 한다. 진짜 실패는 뭔가가 계속 시도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 총선방침 ③번??

[최종 관심사] 갈라지고 파편화된 신자유주의 시대, 우리 운동이 만들지 못한 대중적 계급형성이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운동과 정치세력화의 관건이고,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정치는 매우 중요하고 정당은 계급 형성을 역으로 촉진하기도 한다. 선거연합정당은 중장기 안목으로 관심을 가질만하다.

